

# 대학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재정난 돌파

### '하향식' 추진... 소모적 경쟁 부추겨 자발적 성장 지원, 사업 효과 기대 정부-대학 간 합의점 찾아나가야

대학들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를 두고 대학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총장의 역량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들이 물가상승률 영향과 반값등록금정책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했다. 최근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3개 대학의 사업 성공을 위해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



상명대학교는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식 및 추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상명대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하향식'으로 추진된 탓에 사업 선정에만 매달려 대학 간 소모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I 유형(자율협약형)과 II 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I 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

개선대학이 참여한다. 올해는 별도 선정 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반면 II 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총 5688억원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지대로 자율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대학들이 사업비 항목을 준수하되, 세부 사업들은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 결손분을 보충하기 부족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보여주

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총장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역량진단으로 바꾸면서, 대학들의 평가해 줄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학들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올해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도 대학의 재정지원 정책에 자율을 준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있으나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 모르는 게 '히수'"라면서 "정부와 대학들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노혜정 이사장은 "대학마다 입장과 비전이 다르지만,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의 방향성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이 혁신을 이뤄낼 방법과 전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불법유통 군용 광학장비 등 대대적 단속

### 정부-美 수사당국 수사 착수

정부와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내 불법유통된 군용 총기 광학장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수사대상에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위리어플랫폼 입찰 품목과 미 정부의 수출입 통제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4일 "총포법으로 단속대상인 총기용 광학장비들이 무자격 업체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 수사당국도 자국의 수출입 통제장비가 한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유통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총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기에 부착해 영점조정이 가능한 조준선, 조준점 등의 영상이 맺히는 장비는 총포에 준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총포 및 광학장비 등에 대한 판매허가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허가를 갖춘 업체들은 보안시설과 판매대장, 장비입출기록을 수시로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점검을 받고, 24시간 이상 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포털 사이트 인터넷상과 실종이 아닌 특정 완구용 에어소프트건(비비탄)샵에서 위리어플랫폼 사업에 입찰했던 광학 및 레이저 표적지시 장비와 미군이 사용 중인 군용 광학 및 레이저 표적지시 장비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몇몇 업체는 공동 구매 형식으로 규제대상 품목을 팔면서 동일한 출고예상시기를 올린 만큼 이를



미국 정부의 수출입 통제품목인 레이저 표적지시기. 위에서부터 MAWL DA, PEQ-15.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에 불법유통된 정황이 미 수사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공통의 유통채널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통장거래' 또는 해외에 계정을 둔 '페이팔(paypal)' 등으로 거래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유통시키는 레이저 표적지시 및 야간투시경 등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제하는 '전략물자(ITAR)'로 분류돼 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 수사에 나선만큼 우리 정부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탈은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미 수출제한법안 22장에 근거를 둔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업체 웹사이트에서는 미군의 통제물자인 레이저표적지시기 PEQ-15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

## 자사고 14곳 퇴출... 일반고 내신 경쟁 치열할 듯

### 소송 결과 따라 정원 바껴 혼란 예상 재지정평가 대상학교 지원 감소 전망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이 내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2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중 10곳이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고, 4곳은 학생 모집단 등을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퇴출 예정인 자사고는 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송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서울 소재 자사고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됐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등 지역의 3개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28곳으로 전년(2019학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년도) 42곳에서 14곳 감소하고, 모집인원도 9338명으로 전년(1만2322명)보다 2984명 감소할 전망이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경우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최종 모집정원이 바뀌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자사고측의 자사고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사고 퇴출에 따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일반고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재학생들의 타 학교로의 전출이나, 내년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로 분산될 경우 일반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내년에도 자사고를 유지하는 하남고·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 등의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부가 자사고 퇴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받는 장훈고·대광고·선덕고·보인고·세화여고·양정고·현대고·휘문고 등에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용수 기자 hys@

## 매주 토요일마다 반려동물 행동치료 강연

### 건국대 캠퍼스타운사업단

건국대학교는 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김진기)이 지난 3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예술문화관 분수광장에서 반려동물 행동치료 전문가인 위드펫동물병원 김광식 원장을 초청해 '반려동물 행동문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반려동물과 즐겁게 산책하기'를 주제로 반려동물 행동치료 강연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 KU반려동물 문화축제'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김 원장은 현명한 보호자가 되는 법, 잘못 알고 있는 반려동물 상식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예술문화관 분수광장에서 8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반려동물 행동치료 강연을 진행한다. /건국대학교